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해설

1. ① 2. ③ 3. ④ 4. ③ 5. ⑤ 6. ① 7. ④ 8. ③ 9. ⑤ 10. ④
11. ③ 12. ② 13. ② 14. ⑤ 15. ④ 16. ② 17. ④ 18. ② 19. ③ 20. ②

1. 소비자 권리의 일상 생활에의 적용

정답 해설 : 그림의 차림표에는 각 음식의 가격과 원산지 및 중량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제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각 거래 조건 아래에서 먹을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ㄹ 제시된 자료와 관련이 없는 소비자의 권리이다.

2. 산업 재산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산업 재산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 재산권은 특정한 기술적 창작을 한 자가 이를 공개하는 대신, 국가는 발명자나 고안자 등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

- ① 특허권과 관련이 있다.
- ② 상표권과 관련이 있다.
- ③ 산업 재산권이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 ④ 디자인권과 관련이 있다.
- ⑤ 실용 신안권과 관련이 있다.

3. 합리적 차별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노사 업무 담당자 채용에 법학 전공자와 경영학 전공자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조치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① 사무 보조원 채용에 미혼의 여성을 정하는 것은 기혼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 ② 해외 영업 분야의 채용에 현역 군복무를 마친 자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군미필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 ③ 일반 사무직 채용에 고졸 남성을, 생산직에 고졸 여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고객 관리 분야의 채용에 남성과 여성의 연령을 달리하는 것 또한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없다.

4. 법 적용의 원칙과 법 해석

정답 해설 : 나. 법원이 갑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 갑은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법원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갑이 범칙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될 수 없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다.

ㄴ. 위헌 법률 심사 청구가 없을 경우,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을 할 수 없다.

5. 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며, 수사 후 검사가 기소하면 그 사람은 피고인이 된다.

② 제시문의 (A)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치사죄와 중과실 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③ 타인의 위법 행위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우, 그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건의 목격자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

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A)법의 형법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치사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B)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치사 사건 중 도주 차량 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사건에만 적용된다. 즉, (A)법은 일반법, (B)법은 특별법이다.

ㄱ. 상법은 일반법, 은행법은 특별법이다.

ㄴ. 형법은 일반법, 군형법은 특별법이다.

오답피하기

ㄷ. 형법은 실체법, 형사 소송법은 절차법이다.

ㄴ. 헌법은 상위법, 교육 기본법은 하위법이다.

7. 기본권의 충돌 사례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 간 기본권 충돌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민은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 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8. 배분적 정의의 적용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가)에는 불합리한 차별, 즉 배분적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육아는 여성만의 고유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이혼한 남성과 달리 이혼한 여성에게만 재혼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오답피하기

ㄱ. 여성에게 생리 휴가를 주는 것은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다.

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유흥 주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9. 개정 소년법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과거에는 촉법 소년의 연령 범위가 12세 이상 14세 미만이었었는데, 개정 소년법은 촉법 소년의 연령 범위를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촉법 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제도의 대상 범위 또한 늘어난다.

오답피하기

① 촉법 소년의 연령 범위가 넓어졌다.

② 범죄 소년의 연령 범위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③ 우범 소년은 형사범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④ 촉법 소년과 범죄 소년은 모두 보호 처분이 대상이 된다.

10. 무효와 취소의 적용

정답 해설 :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가)는 취소, (나)는 무효를 의미한다.

④ 대리모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상 무효이다.

오답피하기

① 혼인을 퇴사 조건으로 고용 계약은 무효이다.

②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③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된다.

⑤ 주부 A가 방문 판매 사원 B에게 현혹되어 유아용 영어 교재를 구입한 계약은 법률상 유효하다. 다만 계약을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할 수는 있다.

11. 형사 재판 결과에 대한 분석과 추론

정답 해설 : ③ 1심 무죄 또는 항소심 무죄는 검사가 기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범죄 성립이 부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 ① 형사 항소심 무죄율이 1심 무죄율보다 높다.
- ② 무죄율이 0%일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수와 기소한 사건의 수가 같다.
- ④ 유·무죄 확인 절차는 물론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형의 적용 단계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 ⑤ 1심 판결에 항소하였던 피고인들 중에서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받을 경우, 상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12.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과도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취소나 경감을 요구하는 행정 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

ㄷ.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인은 그 행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갑이 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갑의 잘못이다. 따라서 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을은 근로의 권리가 아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를 생각할 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

13. 학생 징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징계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교장이 내리는 고유 권한으로, 학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할 수 있다.

② 사회 봉사는 징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습권은 제한되더라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때, 학교장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체벌은 징계가 아니다.

⑤ 중학생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14. 등기부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그림의 여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자인 저당권 설정권자가 우선 채권액을 변제받는다. 이후 남은 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의 이전 내역은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록된다. 따라서 알 수 없다.

- ③ 가등기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 ④ 확정일자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는다.

15. 성폭력 피고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과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ㄷ.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에 있다. 또한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징역 3년이라는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부가적 조치이다.

오답피하기

- ㄱ.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자는 가석방이 되더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 ㄴ. 앞에서 진술하였듯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도입한 목적은 성범죄 예방에 있다.

16.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판서된 계약의 자유, 유언의 자유 등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 중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도 하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

17.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최저한도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 인간다운 생활 등에서 밀줄 친 ‘이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됨을 추론할 수 있다. 을이 얘기하고 있는 과업은 단체 행동권의 발현으로, 단체 행동권은 사회권에 속한다. 그리고 정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는 사회 보장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권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갑이 얘기하는 이사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병의 얘기는 납세의 의무와 관련된다.

18. 법정 상속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유류분의 경우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게는 상속 재산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에게는 상속 재산의 3분의 1이 인정된다. 제시된 사례에서 A가 E에게 유언으로 6천만 원을 증여하였다라도 B가 받아야 할 상속분의 2분의 1(3천 6백만 원)이 보장되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A와 C가 동시에 사망하였으므로, B는 D와 더불어 공동 상속인이 된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B는 7천 2백만 원, D는 4천 8백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 ③ A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 복지 시설에 증여한 경우, D는 공동 상속인의 자격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A가 C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B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 ⑤ A가 B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B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A의 전 재산은 D가 상속받게 된다. E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19.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와 환경 오염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③ 불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도 적용된다. 즉, 폐수와 토양 오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면, 폐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다만,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면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A시가 관리하는 도로 시설의 흠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민사 사건이 아니다.
- ④ 병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원의 판결은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니다.

20. 특수한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물론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ㄱ. C의 법정 대리인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B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소홀을 이유로 B의 부모인 A를 상대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사용자 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인 C는 점원 B와 가게 주인 A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ㄷ. 종업의 B의 절도 행위는 사무 집행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A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ㄹ. 동물의 점유자인 수의사 B만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